

광주시, 올해 산업정책 ‘미래 선도형 대전환’ 추진

AI 등 신기술 융합...광주형 3대 뉴딜산업 구체화 산학연협 강화·시민주도 사업 확대·인재 양성 등

광주시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실현을 위해 2022년 지역산업정책을 기업중심, 시민참여, 일자리 중심 미래 선도형 경제구조로 대전환한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노사상생도시’,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공지능 기반 경제도시’ 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테크노파크와 2022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산업의

여건을 분석하며 지역기업을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융합해 미래 핵심동력 산업으로 이끌어갈 전략이다.

또 지역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초광역협력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올해 웰에이징 휴먼 헬스케어밸리 조성 시범사업(광주·전남·북)을 시작으로 초광역에너지공동체 RE300(광주·전남·북), 3대 핵심 거대연구시설인 국가고자기장 연구소(광주·울산·강

원) 구축 추진 등 공간적 제약을 넘어 타 시도와 연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산업을 활성화한다.

지난해까지 착실하게 토대를 다져온 광주형 AI 3대 뉴딜은 일산에서 제2차로 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한다.

디지털뉴딜은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2단계 비전을 이달 말 발표하고 연말까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집적단지 조성 공정을 65%, 인공지능(AI) 창업캠프 제3호관 개관 등 기업과 인재가 찾아오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

그린뉴딜은 롯데마트(2.5MW)·제2순환도로(6개소 4.7MW) 태양광 확대, 에너지 데이터를 종합 관리하는 실시간 에너지정보플랫폼 구축과 함께 분산전원 기반 전력거래라는 새로운 전력서비스 모델을 개발

해 에너지자립도시의 미래를 제시한다.

휴먼뉴딜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캐스퍼 생산 안정화,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발굴 등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일방적인 행정중심의 산업정책 개발과 국민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기업·유관기관·대학·시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상해왔으며, 올해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지역산학연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도 강화한다. 시민들과 제2회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에너지자립마을 거점센터 10개소 추가 설립, 에너지파크 시민활동가 양성 등 시민주도 사업

도 확대한다.

광주지역산업평가단과 함께 국시비가 투입된 지역산업 평가관리 체계를 개선해 성과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컨설팅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전통적인 지역전략산업에 신기술을 융합해 업종추가, 업종전환,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마련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각지대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코로나19의 열악한 환경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기업 133개가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로 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업들도 신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미래형 특화인재 확보에

한창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3기 인공지능사관학교 인원을 180명에서 330명까지 늘리고 교육기간도 7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운영한다. 더불어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기후위기 사관학교, 미래자동차 전환을 선도할 빛고을산학융합원에서 자동차 특화인재를 양성해 적재적소에 빠르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취업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2022년은 인권의 도시 광주가 인공지능을 기반한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며 “인공지능 그린 스마트 시티 실현으로 미래산업도시로 전환을 선도하도록 광주공동체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두번째) 전 대표가 19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희정 전 총남지사를 불쌍하다고 언급한 김건희씨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해찬 “김건희, 영부인 자격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건희씨는 모든 것을 공인 의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이해관계로 인식하는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9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언론에 공개된 김 씨의 통화내역과 관련, “내가 집권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며 안희정 전 지사에 관한 언급도 대통령 후보 부인이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이라면서 “그걸 보고 저분은 영부인이 되지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제고 대책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대 선거자료를 보면 본선 들어가기 전에 40%를 넘는 후보가 거의 없다. 지지율이 38%라면, 투표율 80%를 가정할 때 득표율로 환산하면 45%라고 봐야 한다”면서 “평균으로 보면 30% 후반이 정상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후보 모두 35-38%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들어가 후보등록을 하고 유세차량 다니고 TV 토론 이뤄지면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것이다”면서 “설 무렵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 이번 설 연휴가 끝이 후보 간의 진검승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한 번쯤 변화가 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오선우 기자

시, 콘크리트 품질 감독 강화

광주시가 동절기 냉간기간 중 시공하는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는 1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예상되거나 응결, 경화의 지연 및 아침, 저녁으로 동결피해가 예상될 때 적용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을 준수해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 관련기관이 공공건설현장 및 민간건설현장에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거푸집과 동바리 해체기준 등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도록 전달했다. /오선우 기자

일곡매립폐기물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정밀조사 추진일정 등 보고

광주시는 19일 북구 일곡정소년문화의 집에서 ‘일곡매립폐기물 정밀조사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정밀조사 추진일정 및 정밀조사 내용 등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정밀조사용역의 객관·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조사 업체선정 및 관리·감독을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결정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업체는 12월까지 일곡매립폐기물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밀조사는 매립에 있는 폐기물을 시추해 유해성과 매립상태 등을 조사하고, 침출수·매립가스·주변지하수 등을 1년 동안 모니터링해 매립폐기물의 분해·안정화 정도를 조사 분석한다.

조사 결과 유해성 또는 환경오염이 있다고 판단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권한이 있는 광주 북구에서 LH공사(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조지명령)을 하고, 이 밖의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광주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곡매립폐기물 정밀조사계획을 알린 후 2월에는 주민들과 주변환경오염도 조사지점을 협의·선정할 계획이다.

손인규 시자원순환과장은 “일곡매립폐기물 정밀조사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과의 논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에 추진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악취·토양오염도는 제2·3근린공원 모두 법적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매립가스 메탄농도의 경우 제2근린공원은 불검출로 안정화 단계였다.

제3근린공원은 5.9%로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메탄 5% 이하)을 상회하지만 안정화에 근접하는 수치로 조사됐다. /오선우 기자

정기 브리핑

서삼석, ‘국산 밀 자급률 확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사신)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서 의원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지

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국산 밀 자급률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곡물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이 더해지면 식량안

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산 밀 자급률 확대를 위한 생산 기반 확충과 품질 고도화, 유통·비축 체계 등을 통한 법적 도적 지원 확충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재 “여수에 대학병원 설립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사진)은 19일 ‘여수 대학병원 유치’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 및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전남대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남대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한방병원은 이미 2006년 정부 공모에 의해 부산대에 최종 설치가 결정돼 추진이 불가능하며 일축했다.

김 의원은 “전남대의 (여수 대학병원) 건립 불가 입장도 명확해졌다”며 “불가능한 방법이 매몰되면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를 갈등과 분열로 허비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정치권 갈등 해소와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남 동부권 정치권을 아우르는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추진협의체’를 제안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M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